

‘촛불’ · ‘맞불’ 집회에 대한 태도와 19대 대선: 일관적 유권자와 상충적 유권자

이현우 · 이지호 · 서복경 | 서강대학교

| 국문요약 |

이 글은 촛불집회와 맞불집회를 대상으로 정치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평가에서 한쪽을 찬성하면 다른 한쪽을 반대하는 양극단의 태도뿐만 아니라 동시에 긍정적이거나 동시에 부정적인 다른 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주요한 발견은 첫째, 서로 충돌하는 두 집회를 모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유권자는 두 집회 간에 찬성과 반대의 일관적 태도를 갖는 유권자에 비해 투표결정 시기가 투표 당일까지 늦어졌고, 지지후보의 변경 비율도 높았다. 둘째, 집회찬성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의 정의당 지지 증가와 집회반대집단에 속한 유권자들의 바른정당 지지의 증가가 눈에 띈다. 반면에, 촛불찬성집단에 속한 유권자들의 국민의당 지지 철회가 높고, 집회반대의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의 국민의당 지지 철회 또한 높았다. 마지막으로, 집회태도가 후보선택에 미친 영향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에 의하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의 선택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변수와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의 선택에서 고려한 독립변수가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촛불집회, 맞불집회, 일관적 태도, 상충적 태도, 2017년 대선, 투표선택

I. 문제의식

본 논문은 2016년 가을 이후 전개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불리는 ‘맞불집회’¹⁾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가 19대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두 집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서로 다른 두 시선을 대표하는 상징이자 현실의 집단행동이었다. 물론 참여규모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2017년 5월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내일신문의 유권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촛불집회 참여자가 맞불집회 참여자의 8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규모의 차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여러 달 동안 지속되었던 강렬한 사회갈등을 집약했던 대규모 집단행동과 이를 주시했던 한국사회의 시선이, 19대 대선 결과를 주조한 주요 변인이었을 것이라는 가정은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이 두 집회에 대한 입장으로 등치될 수 있을까? 예컨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모두 ‘촛불집회’에 찬성하고, 반대한 사람들은 ‘맞불집회’에 찬성했을까? 이러한 질문이 연구진의 문제의식이 출발한 지점이었다. 두 집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는 탄핵에 대한 찬·반 태도라는 일차원적 사고 이외에 시민의 정치참여 방식에 대한 상이한 태도라는 다른 차원을 포함할 수 있다. 탄핵에 찬성하더라도 ‘촛불집회’와 같은 대중행동에는 반대할 수 있으며, 탄핵에 반대하더라도 ‘맞불집회’에는 찬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정당태도의 상충성(partisan ambivalence) 연구와 유사한 논리를 취한다. 정당선호 태도가 일차원적이라면 한 정당을 선호할수록 경쟁정당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할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런데 그러한 일관적 태도를 상정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두 정당을 모두 좋아하거나 모두 싫어하는 유권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정당들에 대한 일관적 태도를 보

1) 언론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집단의 집회를 태극기집회라고 부르지만, 태극기라는 용어가 가진 상징성을 볼 때 태극기집회라는 명칭은 옳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탄핵을 요구한 촛불집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맞불집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에는 촛불집회가 대규모화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반대집회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시기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일방적(one-sided voters) 유권자들과 구별하여 상충적 유권자(ambivalent voters)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유형의 유권자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연숙 2014; 정한울 2012).

민주주의 체제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민주주의관은 다양하다. 선출직 공직자, 원내정당 등 제도적 행위자 중심의 정치운영이 바람직하며 시민들의 일상적 참여, 특히 거리에서의 참여는 정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너무 많은 참여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는 견해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이래 면면히 이어져온 명백한 계보를 가진 정치관이다. 반면 ‘참여는 많으면 많을수록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한다.’는 견해 역시 강력한 계보를 가진 민주주의관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촛불집회’든 ‘맞불집회’든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하는 참여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런 가정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두 집회에 대한 찬·반 태도를 교차하여 4가지 태도유형을 설정하고 각 집단의 특성을 비교분석한다. 아울러 집회에 대한 태도차이가 19대 대선에서 후보선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II. ‘촛불’·‘맞불’집회의 경과²⁾

지난 가을 박 전 대통령의 사퇴·탄핵을 둘러싼 두 가지 서로 다른 대중행동의 명칭은 ‘촛불’와 ‘태극기’로 각각 사용되었는데, 이는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들이 공유한 공식 명명을 따른 것이다. 이런 명명은 집회 주최 측이 사용한 집회 명칭에서 정식화되긴 했지만, 당초 주최 측의 기획에서 유래한 것은 아니었다.

박 전 대통령의 사퇴·탄핵 촛불집회를 준비했던 단체의 명칭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이었는데, 이 단체는 11월 5일 제2차 집회 준비를 위해 11월 3일 급히 구성되었고 11월 9일야 공식 발족했다. ‘퇴진행동’

2) 이 장은 각 집회의 경과를 기술하는 것으로, ‘맞불집회’ 대신에 주최측이 명명한 ‘태극기 집회’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의 발족 이전에 이미 두 번의 촛불집회가 개최되었는데, 제1차 집회에서부터 명칭은 이미 촛불집회로 명명되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탄 대중행동의 출발점은 주지하다시피 10월 24일 ‘JTBC 뉴스룸’의 ‘태블릿PC’ 보도였다. 보도 다음날 박 전 대통령은 직접 해명을 했지만 담화 중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곧바로 산발적 대중저항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26일 하루에만 이화여대 총학생회, 서강대학교 학생들, 경희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경향신문 16/10/26, 5). 10월 26일부터 시작된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은 10월 28일까지 단 3일 만에 41개 대학으로 확산되었다. 평일이던 10월 26일 저녁 7시 진보대통합연대회의 서대문지회가 주최하는 집회를 시작으로, 같은 날 저녁 8시 '2016 청년총궐기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도심 버스킹(민중의 소리 16/10/26), 경기도 화성시 ‘박근혜 하야 촛불집회’, 27일 서울 세종로 파이낸스빌딩 앞 ‘최순실 의혹 진상규명 촉구 집회’(노컷뉴스 16/10/27), 28일 전북지역 비상시국회의 주최 촛불집회(오마이뉴스 16/10/27), 대구 시민단체 주도 ‘박근혜 하야 촉구 집회’(뉴스1 16/10/28) 등이 연이어 개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박 전 대통령의 사퇴·탄핵을 요구하며 형성된 대중행동이 누군가의 사후적 명명 이전에 스스로를 ‘촛불’로 상징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촛불집회는 2002년 ‘미선이·효순이 사건’ 발생 직후 만들어진 자발적 저항행동이 야간 촛불집회로 시작된 이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반대 대중행동,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수입협상 반대 대중행동, 2014년 ‘세월호 사건’ 추모와 정부대응에 대한 저항적 대중행동에 이르기까지 시민저항의 역사적 상징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었고,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발하자마자 곧바로 시민저항의 상징으로 차용되었던 것이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사퇴·탄핵 반대 대중행동을 이끌었던 단체의 공식명칭은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로 출발했고, 이 단체는 태극기를 주요 상징으로 사용했다. 이 단체는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인 12월 11일 결성되었다(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2016. <http://cafe.daum.net/tankikuk/GnQD/1> 검색일: 2017.06.27)³⁾. 그런데 ‘탄기국’이 기록하고 있는 공식 주말집회

의 첫 개최일은 2016년 11월 19일이었고 이때부터 공식 차수를 계산하고 있다. 11월 19일 사퇴·탄핵 반대집회의 개최를 최초 공개 표명한 단체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박사모)’으로, 11월 8일 ‘박사모’ 공식카페에 중앙 회장 명의의 게시물 ‘가자! 서울역으로 가자! 광화문으로!’가 게재되었다(세계일보 16/11/08).

11월 19일 제1차 집회는 ‘박사모’ 외에도 다수의 보수단체들의 참여로 서울역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날 단상의 연사들과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주요 상징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사퇴·탄핵 반대집회 주최자 및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상징으로 사용한 것은 11월 19일이 처음은 아니었다. ‘탄기국’이 공식 기록하는 제1차 집회는 11월 19일이었지만, 11월 10일과 12일에도 각기 다양한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있었다. 11월 10일에는 ‘엄마부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통일한국당’ 등 17개 보수단체들이 개최한 ‘대통령 하야 반대 및 국가안보 집회’가 개최되었고, 12일에는 ‘애국시민연합’ 주최 집회가 여의도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때에도 태극기는 주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경향신문 16/11/12). 한편 ‘탄기국’이 주최한 집회에서 태극기를 공식 상징으로 전면으로 내 걸기 시작한 것은 2016년 12월 24일 제6차 집회로 그 날 집회 명칭은 ‘가자 대한문으로! 밤을 빛낼 태극기!’였고, 12월 31일 제7차 집회는 ‘송구영신 태극기!’였다. 그리고 2017년 1월 14일 제9차 집회부터는 ‘9차 탄핵기각을 위한 태극기 집회’, ‘제10차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 등을 공식 집회 명칭으로 사용했다(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력기 운동본부. 2016. <http://cafe.daum.net/tankikuk/GnQD/1> 검색일: 2017.06.27).

박 전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탄핵이 최초 거론된 것은 10월 29일 제1차 촛불 집회가 개최되기도 전이었다. 10월 26일 대학가를 중심으로 성명서 발표가 쏟아졌고 27일부터는 대학교수들의 성명서도 줄을 이었다. 27일 하루에만 성균관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에서 대학교수 명의의 성명서가 제출되었는데, 성균관대학교 교수 32명 명의의 제출된 성명서에 “현재의 대통령은 국가를 이끌 능력과 양심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탄핵이 마땅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서울

3)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력기 운동본부’ 카페 게시물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력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새롭게 출범합니다.’(<http://cafe.daum.net/tankikuk/GnQD/1>)

신문 16/10/27). 정치권에서 자진사퇴가 아닌 탄핵이 최초 거론된 것은 11월 4일로, “국정난택에 따른 자진사퇴 요구가 아니라 탄핵을 해야 될 때가 됐다. 박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하라.”는 이재명 시장의 발언이 있었다(시사저널 16/11/04). 11월 4일은 사태 발생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담화가 있었던 날이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보다는 박 전 대통령의 자진사퇴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10월 31일 정의당이 대통령 자진사퇴 당론을 최초로 결정했고 11월 10일에는 국민의당이, 11월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사퇴당론을 결정했으며 이 시기까지 촛불집회의 슬로건도 ‘즉각 퇴진’이었다. 그러나 11월 20일은 사태전개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 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 때까지 진행된 수사의 중간발표 결과를 내놓았는데, 최순실·안중범·정호성 등에 대한 구속기소 혐의를 밝히면서 대통령에 대해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전격적으로 제시했다. 20일 오후 청와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것은 국회와 언론에 탄핵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다음날 원내 야3당은 탄핵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11월 26일 제5차 촛불집회와 제2차 맞불집회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을 둘러싸고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까지는 국회를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판결까지는 헌법재판소를 둘러싸고 각각 탄핵가결과 기각을 요구하는 대중행동이 전면화되었다.

‘퇴진행동’ 주최 촛불집회는 헌법재판소 탄핵안 가결 직후인 2017년 3월 11일까지, 1월 28일 설날이 있던 주를 제외하고 총 20회 주말마다 개최되었다. 2016년 가을 이래 촛불집회의 참여자 범위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내일신문 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넓을 수 있었던 것은(이지호 외 2017), 과거와 달리 이번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조직되고 지속되었기 때문이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은 2016년 가을~2017년 봄에 이르는 촛불집회의 상징적 장소가 되었지만, 촛불은 이곳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몇 달 동안이나 밝혀져 있었다. 10월 29일 제1차 집회부터 촛불을 든 시민들은 서울 청계광장뿐 아니라 부산역 광장, 광주

5·18민주광장,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울산 태화강역 광장, 전주 풍남문광장 등을 채웠다(헤럴드경제 2016/10/29). 11월 12일 3차 주말집회를 앞두고 주최 측은 전국 각지의 촛불집회 개최정보를 모아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제공하기 시작했고, 11월 19일 제4차 집회를 앞두고는 ‘대동하야지도’라는 별도의 명칭으로 전국 집회 개최정보를 온라인으로 유통시켰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3월 25일, 4월 15일, 4월 29일 3차례 ‘촛불집회’가 더 개최되었고, 조기대선이 끝난 이후인 5월 24일 ‘퇴진행동’은 공식 해단식을 단행함으로써,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분노에서 출발해 탄핵과 대선으로 이어진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1700만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이 행복했습니다.”라는 제목의 ‘해산선언문’에 따르면, ‘퇴진행동’은 별도의 다른 단체를 구성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없이 완전히 해산이 된 상태다.

그러나 당초 대중행동의 목적 달성에 실패한 ‘태극기 집회’는 다른 경로를 겪게 된다. 2016년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결성된 ‘탄기국’은 헌법재판소 탄핵인용 결정 직전 주인 2017년 3월 4일까지 총16차에 걸쳐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다. 3월 10일로 현재 판결일이 결정되자 3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 동안의 연속집회를 선포했고, 3월 10일 판결 직후에는 판결에 저항하는 대규모 집단행동이 전개되었으며 폭력양상을 띠었다. 당일 집회의 여파로 경찰 9명·의경 24명 부상, 4명 사망, 56명 경상 등의 피해가 있었고(뉴스1 17/03/10), 이 사건으로 관련자가 구속되었으며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한국일보 17/06/15).

탄핵 인용 이후 ‘탄기국’은 탄핵기각이 아닌 무효를 목표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이하 국저본)’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활동을 지속했다. 3월 11일을 시작으로 4월 15일까지 매 주말마다 총6차에 걸친 ‘탄핵 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조기대선 직후인 5월 13일 ‘제7차 탄핵 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탄기국’이 ‘국저본’으로 전환되었지만 주최 측이나 참가자들은 모두 ‘태극기 집회’라는 상징을 그대로 사용했다. 그런데 조기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선 대응과 관련하여 ‘국저본’ 내부의 갈등이 발생했고 5월 13일 제7차 대회에서 표면화되었으며, 현재는 하나의 단일대중행동의 조직화는 중단된 상태다.

Ⅲ. 집회태도 및 집단특성

1. 자료 및 분석틀

위에서 ‘촛불집회’와 ‘맞불집회’의 최근 현황까지 소개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조사 시점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한국리서치 공동연구에서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패널 조사 자료다. 1차 조사는 대통령 선거 전인 4월 18~2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433명 대상 전화조사로 이루어졌다. 2차 조사는 선거직후인 5월 10~14일 사이 1차 조사응답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을 통해 1,090명의 응답을 얻어냈다. 본 연구의 주된 독립변수인 ‘촛불집회’와 ‘맞불집회’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은 2차 조사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조사 응답자들의 집회태도에 관한 정보는 2016년 가을 이래 지속된 것이지만 대통령 탄핵과 구속 및 대통령 선거라는 최근 상황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며, 찬성이나 반대에 대한 태도 역시 이러한 상황적 고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집회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정된 종속변수들, 즉 투표결정 시기, 지지후보 변경 여부, 후보선택 이유, 선거관심과 결과 만족도 등에 관한 질문 또한 모두 2차 조사에서 행해졌다. 집회태도와 투표선택 관련 설문은 동일한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표선택이 집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역방향의 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 즉, 선거 결과로 인해 촛불집회에 대한 찬성 태도가 증가한다던가, 촛불집회 찬성자들이 맞불집회에도 찬성하는 관대함을 보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촛불집회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태도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겨울이나 2017년 봄 당시 실시된 다른 조사의 결과와 유사했다. 그리고 집회 태도에 대한 대선 직후 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맞불집회에 대한 지지 증가, 대선이라는 제도적 경쟁의 돌입이라는 상황을 모두 반영한다는 점에서 이전 조사 자료보다 선거와 관련된 태도와 행동에 대한 설명변수로서 더 많은 장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주장하는 바는 상충적 정당태도처럼 촛불집회와 맞불집회에 대한 평가가 일차원적 수준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차원적 관점에서 유형화한

평가태도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틀이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을 설명하는데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두 집회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은 촛불집회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맞불집회를 반대한다는 가정에 토대를 둔다. 그러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자료는 두 집회 모두를 찬성하는 응답자 집단과 두 집회 모두를 반대하는 응답자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인지조화이론(cognitive consistency theory)은 일차원적 관점에서 인간의 태도를 분석해 왔다. 특히 미국처럼 양당제가 구조화된 경우에는 정당 간 경쟁을 상정할 때 매우 자연스런 논리였다. 한 정당에 대한 긍정·부정의 태도가 상반관계(reciprocal relationship)에 따라 다른 정당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정당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증가는 경쟁정당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치심리 영역에서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었는데, 정당에 대한 태도분석을 해 보면 일차원적이고 상호배타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없는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Cacioppo and Berntson 1994; Cacioppo et al. 1997). 공화당에 일체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부정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가정되었지만 새로운 애증 병존적 혹은 양면적 태도의 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김장수 2005, 156-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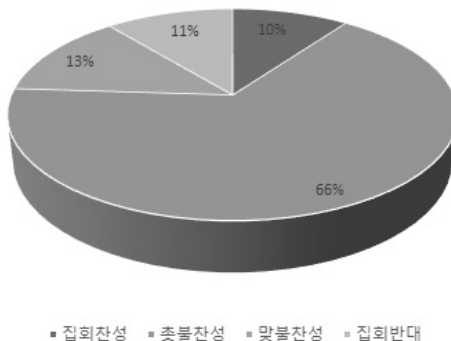
이러한 주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에서도 시사점을 갖는다. 상충적 유권자를 분석한 김연숙(2014)에 따르면,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거나 정치관심이 낮은 집단이 아니며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정보를 추구하고 개방적인 집단이었다고 한다. 또한 정한울(2012) 역시 상충적 유권자들은 무당파나 무관심 층과 구별되는 집단이며 정치 환경에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한국에서 상충적 유권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상충적 태도에 대한 연구들은, 일관된 유권자(consistent voters)는 바람직한 태도를 가진 것으로, 비(非)일관적인 상충적인 유권자는 정치지식이 부족하거나 정치관심이 낮기 때문이라고 보았던 기존의 인식 틀을 수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상충적 태도의 유권자들은 정당 귀속감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슈에 민감하고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세련된 집단임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인지적 부조응과 같은 내적갈등을 겪지 않으며 오히려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결과 상충적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설명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한 촛불집회와 맞불집회에 대한 태도 유형을 분류하면 4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1) 촛불집회 찬성-맞불집회 반대(촛불집단); 2) 촛불집회 반대-맞불집회 찬성(맞불집단); 3) 촛불집회 찬성-맞불집회 찬성(집회찬성); 4) 촛불집회 반대 - 맞불집회 반대(집회반대)로 유형화가 가능하다.

인간의 태도를 일차원적·양극적 관점에서 보면 응답자들은 일관된 태도를 갖는다고 가정하게 되고 촛불집단과 맞불집단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 시각에서 왜 상충적 태도를 보이는 응답자들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상충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정치적 세련도가 낮고 정치에 관심이 적기 때문에 두 집회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비일관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래의 경험 분석에서 보듯이 상충적 응답자가 20%가 넘을 정도로 두 집회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안적 설명방법은 다차원적 관점에서 이들 상충적 태도의 응답자들이 설문을 다수의 응답자들과 다르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촛불집회와 맞불집회의 내용과 목적을 근거로 평가태도를 결정했다. 반면에 상충적 태도를 보인 응답자들은 시민의 직접적 정치참여라는 관점에서 찬성과 반대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2. 촛불-맞불집회에 대한 태도 유형



〈그림 1〉 촛불-맞불집회를 둘러싼 네 가지 태도

출처: 내일신문-현대정치연구소, 2017년 5월 10일 조사 자료

이번 조사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대규모 저항시위가, 이어진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유권자에게 촛불집회와 맞불집회에 대한 태도를 각각 물었다. 태도유형에 따른 빈도수를 확인하기 위해 두 집회에 대한 찬성과 반대 태도를 교차 분석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로, 촛불집회에는 찬성하지만 맞불집회에는 반대하는 태도를 ‘촛불찬성집단’이라고 명명하였다. 촛불집회에 참여했거나 촛불집회의 목적과 취지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태도를 보였는데, 유권자 중 66%가 촛불집단에 속한다. 두 번째 유형은 촛불집회에 반대하지만 맞불집회에는 찬성하는 집단으로 이들을 ‘맞불찬성집단’이라고 부른다. 맞불집회에 참여했거나 그 집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가질 수 있는 태도로, 유권자들 중 13%가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규모에 있어 맞불집단은 촛불집단보다 훨씬 작지만 10%가 넘는 유권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 번째 유형은 상충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로, 촛불집회에 찬성하면서 동시에 맞불집회에도 찬성하는 ‘집회찬성집단’이다. 이러한 태도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롯된 양극단의 저항행위 사이에서 양극적으로 어떤 한쪽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으로 무지에 의한 결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감정과 태도의 차원과 다른 차원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집회에 대한 태도는 박근혜 퇴진을 목표로 하는 촛불집회도 찬성하지만, 비록 소수이지만 그 반대의 주장도 의미가 있다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유형에 속한 유권자들은 다수의 지지를 받는 촛불집회만이 옳은 것이고 맞불집회는 틀린 것이라는 일차원적 사고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인다. 이들이 두 집회를 평가하는 기본태도는 국정농단 사태를 둘러싼 찬반의 의견이 모두 자유로이 표출되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원칙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들은 탄핵국면에서 박근혜 탄핵을 둘러싼 찬반의 정치적 투쟁의 태도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나 시민참여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유권자의 10%가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촛불집회에 반대하면서 맞불집회에도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유권

자들을 ‘집회반대집단’으로 부른다. 이들은 전체유권자의 11%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다. 이들 역시도 집회찬성집단과 유사하게 비일관적 태도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집회에 대한 평가태도 역시 시민참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가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민주주의가 균중심리에 따른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인식 집단일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통치행위로 인해 일련의 국정농단사건들이 알려지고, 급기야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만,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질서를 어지럽힐 것이 아니라 제도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된 의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반대집단에 속한 유권자들은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는 행위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촛불집회뿐만 아니라 맞불집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들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탄핵에 반대해서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격한 감정에 휩싸여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 이렇게 볼 때, 집회반대 집단에 속한 유권자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시민들의 직접 참여에 비판적이며 대의민주주의의 법과 제도적 절차에 따른 문제해결을 중시하는 원칙적인 혹은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로 볼 수 있겠다.

요약하면 국정농단사건으로 야기된 양극단의 저항행위에 대한 태도는 다층적이며 일차원적이지 않을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촛불찬성집단과 맞불찬성집단은 탄핵국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반대와 지지를 둘러싼 양극단의 태도다. 그리고 집회찬성집단과 집회반대집단의 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두 집단의 두 집회를 향한 상반된 태도와는 다른 차원의 독립적 성격을 가진 것이다. 즉, 두 집회를 모두 찬성하는 사람들은 촛불집회에 찬성하고 맞불집회에 반대하는 사람에 비해 더 자유주의적이어서 표현의 자유와 시민 참여를 중시하며, 두 집회를 모두 반대하는 사람들은 촛불집회에 반대하고 맞불집회에 찬성하는 사람들에 비해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에 부정적이며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의 태도를 갖는다고 기대된다.

〈표 1〉 촛불-맞불집회 태도와 참여 경험

집단명칭	집회태도	촛불집회 참여경험		맞불집회 참여경험		사례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집회찬성	촛불찬성-맞불찬성	16.9	83.1	2.7	97.3	87
촛불찬성	촛불찬성-맞불반대	39.2	60.8	0.6	99.4	586
맞불찬성	촛불반대-맞불찬성	1.7	98.3	15.8	84.2	117
집회반대	촛불반대-맞불반대	4.7	95.3	5.5	94.5	101
	전체	28.2	71.8	3.4	96.2	891

출처: 내일신문-현대정치연구소, 2017년 5월 10일 조사 자료

〔표 1〕은 촛불-맞불집회에 대한 태도에 따른 양 집회 참여경험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당연히 촛불찬성집단에서 촛불집회 참여비율이 39.2%로 가장 높았고, 이들의 맞불집회 참여 비율은 0.6%로 가장 낮았다. 대조적으로 맞불찬성집회 구성원 촛불집회 참여경험은 1.7%로 가장 적었고, 맞불집회 참여경험은 15.8%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두 집단에 속한 유권자들의 집회태도와 참여행태는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상충태도의 두 집단은 양극단의 중간에 위치하였다. 집회찬성집단의 촛불집회 참여율은 16.9%로 촛불찬성집단의 참여율보다 22.3%p만큼 낮았고, 집회반대집단의 맞불참여율은 5.5%로 맞불찬성집단의 참여율보다 10.3%p 더 낮았다. 이를 통해 양 집회에 동조적이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은 촛불집회와 맞불집회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덜 행동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촛불과 맞불집회를 모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촛불 대 맞불’의 대립구도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는 성향의 사람들임을 보여준다.

3. 집회 태도의 성격

다음으로는 촛불집회와 맞불집회에 대한 네 가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정치 정향적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이들 태도의 특성을 좀 더 상세히 확인해 본다.

〈표 2〉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정치정향에 따른 촛불-맞불집회에 대한 태도

영역	변수	촛불-맞불 태도				사례수	X ² 검증
		집회찬성	촛불찬성	맞불찬성	집회반대		
성별	남	8.3	63.1	13.6	14.9	434	X ² =12.749 p<0.01
	여	11.2	68.2	12.7	7.9	457	
연령	20대	22.1	74.9	2.2	0.7	153	X ² =227.954 p<0.001
	30대	9.1	83.8	3.9	3.1	159	
	40대	12.0	76.1	4.8	7.1	191	
	50대	3.1	61.4	18.5	17.0	186	
	60세 이상	5.1	38.8	31.6	24.4	203	
이념	진보	8.5	89.8	0.6	1.2	301	X ² =213.366 p<0.001
	중도	12.0	65.6	10.0	12.4	304	
	보수	8.8	40.1	31.1	20.0	265	
선호 정당	더불어민주당	8.9	90.2	0.6	0.4	323	X ² =545.690 p<0.001
	자유한국당	3.6	4.2	60.4	31.8	140	
	국민의당	14.5	73.3	2.9	9.3	106	
	바른정당	11.6	63.4	6.8	18.2	66	
	정의당	8.7	86.8	1.9	2.6	101	
	무당층	14.4	50.7	13.0	21.9	133	
전체		10.0	65.7	13.2	11.1	891	

출처: 내일신문-현대정치연구소, 2017년 5월 10일 조사 자료

〔표 2는 촛불-맞불집회를 둘러싼 네 가지에 태도유형과 인구사회학적 배경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은 두 집회와 관련한 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촛불찬성집단에서 여성(68.2%)이 남성(63.1%)보다 더 많았고, 집회찬성 집단에서도 여성(11.2%)이 남성(8.3%)보다 더 많았다. 맞불찬성의 태도에서 남성과 여성은 각각 13.6%와 12.7%였다. 집회반대집단을 보면 남성(14.9%)이 여성(7.9%)보다 많았다. 촛불집회 참여라는 직접행동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참여율이 낮지만,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를 찬성하는 태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다.

돌봄 노동 등의 이유로 여성이 남성보다 촛불집회 참여율이 낮지만, 남성 못지않게 국정농단사건에 분노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위 유지를 거부했음을 알 수 있다(이지호 2017).

촛불-맞불집회에 대한 태도차이는 연령대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촛불찬성 집단은 30대에서 83.8%로 가장 많았고, 40대에서 74.9%, 20대에서 74.9%로 나타났다. 이 집단 구성에서는 50대와 60대 사이에서 크게 차이가 났다(61.4% 대 38.8%). 50대가 40대에 비해 14.7%p 적었지만, 60대 이상보다는 22.6%p나 많았다. 박근혜 탄핵을 이끈 국민여론의 조성에서 50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촛불집회에 반대하고 맞불집회에 찬성하는 소위 친(親)박 성향의 유권자들은 40대까지 순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났으나 그 비율은 4.8%에 불과했다. 그러나 50대에 이르면 이러한 태도는 18.5%로 늘어났고, 60대 이상의 유권자 사이에서는 31.6%에 달했다.

흥미로운 것은 연령에 따라 양 집회에 대해 상충적 태도를 갖는 유권자들의 규모 차이다. 집회찬성집단의 태도는 20대에서 22.1%로 가장 많았고, 30대에서 9.1%로 줄었으며, 40대에서는 12.0%였다. 20대에서 두 집회 모두를 찬성하는 태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태도가 자유주의적 성향의 태도임을 시사한다. 20대는 30대 이상 연령대에 비해 촛불을 지지하면 맞불집회에 반대해야 하는 태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움을 알 수 있다. 집회반대집단의 태도는 50대의 모습에서 유추할 수 있다. 연령대의 전반까지 청년기의 민주화 투쟁을 공유하고 있는 50대의 두 집회 반대 태도는 17.0%로 맞불찬성집단의 18.5%와 큰 차이 없었다. 이는 맞불찬성 태도가 두 집회를 모두 반대하는 태도보다 무려 13.1%p 더 많은 60대 이상의 연령대와 비교된다. 민주화세대이지만 나이가 들어 보수화 경향이 있는 50대에서 두 집회를 모두 반대하는 태도가 맞불찬성 태도만큼이나 많이 나타난 것은 그러한 태도가 냉전수구적인 성향과 거리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2]는 또한 정치정향에 따른 집회태도의 차이도 보여주고 있다. 촛불찬성집단의 태도는 진보층에서 89.8%로 가장 많고, 보수층에서 40.1%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반대로 맞불찬성 태도는 보수층에서 31.1%로 가장 많았고, 진보층에서는 0.6%로 미미하게 나타날 따름이다. 즉, 두 집회 중 어느 한쪽을 찬성하고 다른 쪽을 반대하는 대립적 태도는 기존의 정치균열을 반영하듯 이념성향별

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집회찬성의 태도는 중도층에서 12.0%로 가장 많았고, 보수층과 진보층에서는 각각 8.8%와 8.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중도층에서 집회찬성 구성원이 가장 많은 것은 이러한 태도가 기존의 정치균열과 거리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집회반대의 태도는 보수층에서 20%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중도층에서 12.4%, 진보층에서는 1.2%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대의민주주의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가 보수층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더욱 흥미로운 것은 중도층이 보여주는 집회태도의 차이다. 다른 이념집단과 달리 중도층에서는 두 집회에 대한 찬성(12.0%)와 반대(12.4%)의 태도가 맞불집회를 찬성하는 태도(10.0%)보다 많았다. 전체 국민의 평균에서 맞불찬성의 태도가 두 번째로 많은 것과 비교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두 집회를 동시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태도가 기존의 보수와 진보 구도와 독립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두 집회를 모두 찬성하는 유권자가 중립적인 중도층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들이 자유주의적인 성향의 사람으로서 촛불집회는 선(善)이고 맞불집회는 악(惡)이라는 갈등적 사고로부터 벗어났음을 보여준다.

한편, 집회태도의 성격은 선호정당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촛불찬성집단의 비율이 민주당(90.2%), 정의당(86.8%), 국민의당(73.3%), 바른정당(63.4%) 지지층 순으로 많이 나타났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4.2%에 불과했다. 맞불찬성집단의 비율은 정확히 그 역순이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유권자들 중 13.2%에 불과했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 중에서는 무려 60.4%였다. 그러나 두 집회 모두를 찬성하는 유권자들은 국민의당(14.5%)과 바른정당(11.6%) 지지자 순으로 많았고, 무당층에서도 14.4%나 되었다. 그러나 두 집회 모두 찬성하는 비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9%, 자유한국당에서는 3.9%에 그치고 있다. 결국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대신에 제3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들과 선호정당이 없는 무당층 사이에서 두 집회를 모두 찬성하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두 집회를 반대하는 태도는 두 집회를 찬성하는 태도와 정당선호에서 달랐다. 이러한 태도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31.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무당층(21.9%)에서 많았다. 더욱이 흥미로운 것은 바른정당 지지층 가운데 두 집회를 모두 반대하는 유권자가 18.2%

로 맞불찬성의 유권자(6.8%)보다 약 3배 더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두 집회를 모두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성향이 바른정당이 내건 ‘개혁적 보수’와 가깝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론적으로, 두 집회를 모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상충적 유권자들은 기존의 정당균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이 확인하고 있듯이 한국의 정치균열을 나타내는 ‘진보 대 보수’의 이념성향은 민주화 이전 시기부터 존재했던 ‘민주주의 대 발전주의’, 민주화 이후 부각되었던 ‘대북 온건 대 대북 강경’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강원택 2003; 이지호 2008). 2016-17년 촛불정국에서도 이러한 이념 지형은 그대로 드러났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의 문제는 더욱 크게 부각되었고, 촛불찬성과 맞불찬성은 각각 ‘민주 대 반민주’의 균열라인의 한축을 담당하였다. 이에 비해서 두 집회 모두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집단들은 이러한 정치균열 라인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중에 중도층, 무당층,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제3당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집단의 정당일체감은 약하며, 투표 선택 또한 집단 정체성에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적 가치관에 따르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기대된다.

Ⅳ. 집회태도와 선거

1. 투표결정의 지체와 지지후보 변경

이 장에서는 두 집회에 대한 4가지 태도가 구체적으로 선거에서 투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앞의 분석을 토대로 촛불찬성의 태도를 지닌 유권자들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가장 낮고, 반대로 맞불찬성의 입장을 가진 유권자들이 홍후보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촛불과 맞불집회를 모두 찬성하거나 모두 반대하는 태도를 가진 상충적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들의 투표방향뿐 아니라 투표결정의 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투표결정시기와

투표결정 변경의 여부이다. [표 3]은 집회태도에 따른 투표결정시기의 분포를 보여준다. 표에서 두 집회에 모두 찬성하거나 반대한 유권자들은 투표결정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일 당일에 후보선택을 한 투표자 비율을 보면, 집회찬성집단과 집회반대집단에서 각각 16%와 15.5%로 맞불찬성 태도의 유권자 중 7% 및 촛불찬성집단의 유권자 중 11.8%보다 월등히 많다. 마찬가지로 선거운동 기간 중에 투표결정을 한 비율도 두 집회를 모두 반대한 유권자 중 54.7%로 촛불찬성집단에 속한 유권자들의 39.4%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표 3〉 집회태도와 투표결정시기 및 지지변경 (%)

집단	투표결정시기				지지후보 변경	인원
	대선후보 결정전	대선후보 결정 직후	선거운동 기간 중	투표일 당일	변경비율	
집회찬성	19.7	14.5	49.8	16.0	43.4	85
촛불찬성	28.1	20.4	39.4	11.8	29.9	581
맞불찬성	20.5	21.3	51.2	7.0	44.6	114
집회반대	13.7	16.1	54.7	15.5	53.8	95
전체	24.7	19.5	43.6	12.0	35.6	875
χ^2 검증	$\chi^2=23.803, p<.05$				$\chi^2=19.091, p<.001$	

출처: 내일신문-현대정치연구소, 2017년 5월 10일 조사 자료

이와 동일한 맥락의 결과가 지지후보 변경비율에서도 나타난다. 투표결정시기가 늦은 것처럼 지지후보의 변경비율도 집회찬성집단과 집회반대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응답자의 지지후보 변경비율이 35.6%인데 비하여 두 집회 모두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변경비율은 53.8%이고 모두 찬성하는 유권자의 후보 변경비율도 43.4%나 된다⁴⁾. 투표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지체현상은, 촛불

4) 맞불찬성 유권자들의 변경비율(44.6%)이 상층적 태도 중 하나 인 집회찬성 유권자들의 변경비율(43.4%)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은 1차(선거전) 조사 시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실제 투표에서는 홍준표 후보에게로 쏠렸기 때문이다.

과 태극기 집회에 모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결정함에 있어 탄핵이슈에만 쫓매이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상충적 정당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시기가 늦어진다는 기존연구(김연숙 2014; 정한울 2012)와 일치한다.

앞에서 두 집회에 대한 태도에 따라 지지후보 변경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정리한 것이 [표 4]이다. 이 표는 대선 이전과 직후 두 차례의 패널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지지후보 변경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지지후보 변경내용을 분석하면 집회에 관한 태도가 투표결정에 미친 영향을 좀 더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 중 촛불찬성집단의 유권자들은 지지가

〈표 4〉 지지후보 변경내용

1차 2차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인원
문재인	전체	87.7	1.2	3.7	2.4	4.8	357
	집회찬성	69.6	-	20.9	6.6	3.0	27
	촛불찬성	90.3	0.4	2.3	1.7	5.3	293
	χ^2 검증	$\chi^2=212.242, p<.001$					
홍준표	전체	3.5	92.0	0.0	3.0	0.8	115
	촛불찬성	33.9	66.1	-	-	-	7
	맞불찬성	-	100.0	-	-	-	57
	집회반대	2.3	93.1	-	3.2	-	29
χ^2 검증	$\chi^2=27.484, p<.01$						
안철수	전체	17.5	23.5	50.6	5.5	2.9	365
	집회찬성	13.8	10.9	69.8	1.7	3.8	32
	촛불찬성	28.5	4.1	58.8	4.5	4.1	175
	맞불찬성	-	78.7	16.9	4.4	-	36
집회반대	2.2	52.4	40.1	5.4	-	41	
χ^2 검증	$\chi^2=118.774, p<.001$						

※ 표에 제시되지 않은 부분은 빈도수가 5명 이하인 경우임.

출처: 내일신문-현대정치연구소, 2017년 4월 18일 - 5월 10일 조사 자료

매우 안정적이었다(90.3%). 반면에 집회찬성집단의 유권자들 중 20.9%는 안철수 후보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에서 문후보로 돌아선 유권자들을 보아도 유사한 패턴이 발견된다. 촛불찬성집단의 입장에 있는 유권자들이 안 후보에서 문 후보로 돌아선 비율이 가장 높다(28.5%). 반면에 집회찬성집단의 유권자들이 안 후보에 대한 지속적 지지를 보낸 비율이 가장 높다(69.8%). 결국 촛불찬성집단의 유권자들은 문 후보의 지지로 쏠리는데 비해 두 집회 모두를 찬성하는 유권자들은 안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맞불찬성 태도의 유권자들은 절대적으로 홍준표 후보에게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집회반대집단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 기간 중 홍 후보의 지지로 돌아서는 경향이 농후했다. 대선후보들 중 홍 후보가 유일하게 촛불집회에 반대 입장에서 서 있었기 때문에 집회반대집단에 속한 유권자들이 집중적으로 홍 후보에게 지지를 보낸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두 집회 모두를 반대하는 유권자들 중에서 홍 후보의 지지가 상당히 증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차 조사에서 안 후보를 지지했던 집회반대에 속한 유권자들 중에서 최종결정에서 홍 후보를 택한 비율이 52.4%로 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그대로 유지한 비율(40.1%)보다 더 높다. 이러한 결과는 홍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촛불반대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맞불집회를 찬성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는 크게 고려요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후보선택 이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촛불찬성태도의 유권자들 중 맞불집회를 표명한 유권자들은 문재인후보 지지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 후보 지지자들 중 90.3%가 2차 조사에서도 지지를 그대로 유지했고, 1차 조사에서 안 후보 지지자들 중에는 28.5%가 문 후보 지지로 돌아섰다. 반면에 두 집회 모두를 찬성하는 입장의 유권자들은 안 후보에 대한 지지로 돌아선 경우가 많았다. 위의 표를 보면 집회찬성집단에 속한 유권자들 중 1차 조사에서 안 후보 지지자들의 2차 조사 유지율은 69.8%로 안 후보의 전체지지유지율 50.6%보다 훨씬 높았다. 뿐만 아니라 1차 조사에서 문 후보를 지지했던 집회찬성 집단의 유권자들 가운데 20.9%가

안 후보 지지로 돌아섰다. 전체적인 선거판세가 문 후보에게 지지가 몰리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집회찬성자들 중 문 후보에서 안 후보의 지지변경이 20%가 넘고 반면에 안 후보에서 문후보로 변경한 비율이 13.8%에 그쳤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한편, 홍 후보에 대한 지지여부는 촛불반대 여부로 결정되었으며, 맞불에 대한 찬반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촛불반대 입장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1차 조사에서 홍 후보를 선택한 비율을 보면 맞불 찬성집단의 유권자들 중에는 100%가 그리고 집회반대 유권자들의 93.1%가 2차 조사에서도 여전히 홍 후보를 택했다. 뿐만 아니라 촛불집회에 반대하면서 1차 조사에서 안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 중에서 맞불찬성 유권자들의 78.7% 그리고 맞불반대 유권자의 52.4%가 홍 후보 선택으로 돌아섰다. 결국 홍 후보 선택에는 촛불반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처럼 두 집회에 대한 태도에 따라 선호 후보가 달라지는 것은 상이한 태도 집단 사이에 후보선택의 이유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지후보 선택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각 집단의 특성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는 집단별로 지지후보 선택 이유의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집회찬성집단에 속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적폐청산보다 국민통합이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안 후보를 택한 유권자들은 정책에 관심 있는 경우(37%)가 문 후보 선택자들의 정책고려(11%)보다 월등히 높았다. 한편, 집회찬성집단과 촛불찬성 입장의 유권자들의 비교도 흥미롭다. 적폐청산을 가장 많이 고려한 비율이 전자의 경우 문 후보 선택(27.4%)와 안 후보 선택(7%)인데 비해 후자집단의 경우 문 후보 선택(46.2%)과 안 후보 선택(14.4%)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회찬성 유권자들에 비해 촛불찬성집단에서 적폐청산을 훨씬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 보면 후보선택에서 정책을 고려한 비율이 집회찬성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 역시도 알 수 있다.

맞불찬성과 집회반대의 태도를 가진 유권자의 대부분은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를 선택했다. 이들이 홍 후보를 택한 이유 중 가장 비율이 높은 항목은 보수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이번 대선에서 주목받은 후보 중 전통보수를 표방하고 나선 후보가 유일하게 홍준표 후보였다는 점에서 보수이념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유권자들은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었다. 홍 후보가 보수의 상징이라

는 이유 다음으로 높은 응답빈도가 나타난 것이 정책이다. 홍 후보를 선택한 맞불 찬성자들 중에서 정책을 고려했다는 응답이 28.9%이며 집회반대집단에서 31.1%가 홍 후보의 정책을 보고 지지를 했다고 답했다. 보수의 상징과 보수적 정책이라는 이념적 성향에 따른 홍 후보의 선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촛불집회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아니라 보수에 대한 진보의 도전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촛불에 대한 반대는 보수진영의 투표를 결정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집회태도와 후보선택 이유 (%)

집회태도	선택후보	적폐 청산	보수 대표	국민통합	다른 후보 싫어서	당선 가능성	정책	정당고려	인원
집회찬성	문재인	27.4	-*	33.0	16.6	3.3	11.0	5.7	31
	안철수	7.0	-*	36.2	19.8	0.0	37.0	0.0	31
촛불찬성	문재인	46.2	-*	28.2	4.8	5.5	8.7	5.7	352
	안철수	14.4	-*	24.1	20.1	3.9	33.4	2.5	123
맞불찬성	홍준표	-*	42.3	-*	12.7	5.2	28.9	8.8	102
집회반대	홍준표	-*	30.0	-*	25.5	2.2	31.1	8.0	68

※ 후보에 대해 질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설문에서 후보선택의 이유는 각각의 후보에 대해서 물어짐

출처: 내일신문-현대정치연구소, 2017년 5월 10일 조사 자료

3. 집회태도와 선거정서

집회태도에 따라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평가가 달랐다. [표 6]에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선거관심의 정도를 보면 촛불찬성집단의 관심이 가장 컸다(98.2%). 정권교체 정서의 중심이 이데이고, 이 집단이 지지하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아 전체적으로 선거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볼 때 높은 선거 관심 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맞불찬성집단의 선거관심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이들은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 촛불집회를 박근혜정부에 대한 정치적 도전으로 인식하였고, 패배가 확실해 보이는 선거에 흥미를 잃은 것 역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관심 정도의 차이는 선거결과에 대한 만족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선거관심이 가장 높았던 촛불찬성집단의 선거결과 만족점수는 7.8점으로 매우 높고, 반대로 선거관심이 가장 낮았던 맞불찬성집단에서 선거결과 만족 점수는 2.5점으로 극단적으로 낮았다. 이 집단에서 긍정평가인 6점 이상의 만족점수 비율은 8.3%에 그치고 있다.

아래 표에서 관심을 두고 보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두 집회 태도 차이에 따른 이념점수의 차이다. 이념성향을 진보에서 보수방향으로 정리하면 촛불찬성집단(4.24), 집회찬성집단(4.68), 집회반대집단(6.51),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불찬성집단(7.41)이 가장 보수적 이념성향의 순서다. 앞서 투표결정에서 본 바와 유사하게 이념에서도 촛불찬성과 반대여부가 이념차이를 명백히 보여준다. 이념점수 측정 결과 촛불을 찬성하는 집단들은 5점 이하로 중도진보의 위치에 있고, 촛불을 반대하는 집단들은 중도보다는 훨씬 보수 측에 자리한다. 그리고 진보성향의 이념 집단일수록 선거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결국 선거관심과 선거결과 만족도 그리고 각 집단의 이념점수를 통해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 상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촛불찬성집단과 맞불찬성집단은 국정농단 사태에 기반하여 선거경쟁 구도에 따른 후보선택을 하였으며, 집회찬성집단과 집회반대집단에 속한 유권자들은 자신의 평상시 정치신념에 따른 투표결정의 경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선거관심과 선거만족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표 6〉 집회태도와 선거정서

집단	관심있음(%)	관심없음(%)	만족점수	이념점수	인원
집회찬성	91.8	8.2	6.83	4.68	86
촛불찬성	98.2	1.8	7.78	4.24	586
맞불찬성	89.7	10.3	2.46	7.41	117
집회반대	93.3	6.7	4.76	6.51	101
전체	95.9	4.1	6.65	4.95	890

출처: 내일신문-현대정치연구소, 2017년 5월 10일 조사 자료

이들의 선거정서를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정보가 정당지지의 변화다. 아래 [표 7]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에 정당지지의 변화 정도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는 위에서 주장한 바, 상층적 태도의 유권자들이 일관적 유권자들에 비해 선거 경쟁에 덜 예민하다는 주장을 다시금 뒷받침해주고 있다. 집회찬성집단에서 정당지지 변화를 보면 정의당으로의 유입이 가장 눈에 띄었고(7.5%), 집회반대집단에서는 바른정당에 대한 지지 증가가 두드러졌다(6.5%). 만일 이들 집단이 선거 결과에 예민했다면 당선가능성이 가장 낮았던 정의당과 바른정당으로의 지지가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집단에 속한 유권자들은 TV토론 등 선거운동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평상시 정치가치관과 일치하는 정당이 정의당 혹은 바른정당이라고 판단하여,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그 정당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에 촛불찬성집단에 속한 유권자들의 지지정당 변화를 보면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철회 비율이 가장 높고(-6.2%)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늘어났다(2.4%).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안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낮아졌고 촛불집회의 목적을 가장 대표하는 인물이 문후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바른정당으로의 지지증가(3.8%)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에 대한 인지도 확산과 개혁보수라는 기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촛불찬성집단의 이념이 가장 진보적인데 만일 이 집단이 선거결과에 예민하지 않았다면 집회찬성집단보다 정의당에 대한 지지가 더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촛불찬성집단의 정의당에 대한 지지는 1%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 집단에서는 이념철학보다는 선거결과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더 많았던 것이 지지정당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7〉 정당지지의 변화 (%)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무당파	인원
집회찬성	0.8	-0.9	-3.5	-0.8	7.5	-3.0	82
촛불찬성	2.4	-0.7	-6.2	3.8	1.0	-0.4	568
맞불찬성	0.8	12.7	-6.8	-2.3	-2.5	-2.0	110
집회반대	-2.7	4.4	-12.6	6.5	-3.3	7.7	95
전체	1.3	1.7	-6.7	2.9	0.6	0.1	854

출처: 내일신문-현대정치연구소, 2017년 4월 18일 - 5월 10일 조사 자료

한편, 촛불집회에 반대하는 집단의 지지정당변화를 보면 맞불찬성집단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급격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12.7%). 그 변동의 절반은 국민의당으로부터 지지철회에서 온 것이다(-6.8%). 또한 바른정당과 정의당의 지지철회도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지변동은 맞불찬성집단에 속한 유권자들이 소위 보수의 상징인 자유한국당의 홍 후보 지지로 집중하여 선거 결과를 승리로 이끌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집회반대집단에서 발견된 주목할 현상은 무당파의 증가(7.7%)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정당들이 지지자들 동원하고 이에 따라 부동층과 무당파의 감소가 일반적 현상이다. 위의 표에서도 집회반대집단을 제외하곤 모두 부동층이 감소하였다. 집회반대집단에서 지지정당 철회의 증가는 이미 앞의 분석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다. [표 6]에서 홍 후보를 택한 이유를 보면 다른 후보가 싫어서라는 답변이 25.5%로 다른 집단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의 선거정서는 시민참여 집회가 국가 질서를 깨뜨린다는 인식이 강하며 따라서 촛불집회를 지지하는 후보도 반대하고 동시에 국정농단에 대한 보수의 책임도 묻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집단은 선거결과를 위해 자신들의 정치정향과 일치하지 않는 투표선택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후보선택의 다변량 모델: 다항로지트 분석

위에서 이변량분석 방법을 통해 각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각 집단의 특성이 후보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각 요인의 순수효과 측정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항로지스틱 기법을 사용한 다변량분석을 시도하였다. 로지스틱 분석은 종속변수가 두 개의 값으로 이루어진 더미변수일 때 사용하는 기법이며, 다항로지스틱은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의 범주형 변수 값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적합한 통계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자료에서 의미 있는 정도의 지지를 받은 세 명의 후보,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만을 선택하여 분석을 시도하도록 한다. 그리고 분석에서 기준은 안철수 후보로 정하여 안 후보에 비해 문 후보와 홍 후보를 선택할 상대적 확률에 각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표 8) 투표선택과 집회태도 다항로짓 분석

	문재인/안철수				홍준표/안철수			
	B값	표본오차	유의확률	Exp(B)	B값	표본오차	유의확률	Exp(B)
절편	-1.47*	.85	.08	-	-4.52***	1.07	.00	-
연령	-.06	.11	.58	.94	.38**	.14	.01	1.46
학력	.35*	.19	.06	1.42	-.02	.18	.89	.98
이념	-.13*	.07	.08	.88	.34***	.10	.00	1.41
성별	-.01	.26	.96	.99	.61**	.31	.05	1.83
촛불찬성	.57**	.29	.05	1.76	-1.56***	.40	.00	.21
집회반대	-.15	.80	.85	.86	.93**	.46	.04	2.52
맞불찬성	-.88	1.27	.48	.41	.88*	.50	.08	2.40
더민주당	3.35***	.27	.00	28.47	-.36	.62	.56	.70
새누리당	-.32	.90	.72	.72	2.57***	.42	.00	13.06

출처: 내일신문-현대정치연구소, 2017년 5월 10일 조사 자료

위의 표에서 먼저 안 후보 선택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문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학력이 높을수록 안 후보보다 문 후보를 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변수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계수 값이 음이라는 것은 진보성향일수록 문 후보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령이나 성별은 안 후보보다 문 후보를 택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중심주제인 집회에 대한 태도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집회찬성집단을 기준으로 삼았으므로 그 집단에 비해 촛불찬성집단은 문 후보를 택할 확률이 1.7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 후보보다 문 후보를 선택할 확률에 맞불찬성이나 집회반대집단에 속한다는 것이, 근거기준인 집회찬성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통계결과는 촛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문 후보와 안 후보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가 촛불집회를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촛불집회 태도를 중시하는 촛불반대 입장의 유권자들은 두 후보 사이에 의미 있는 차별성

을 두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을 기준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안 후보보다 문 후보를 택할 가능성은 무려 28배 이상 높다. 그러나 이 수치를 통해 한국에서 정당이 투표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19대 대선은 후보자 중심의 선거운동이었고 후보를 선호하기 때문에 선거기간 동안 선호후보의 소속정당에 대한 지지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표 8]에서 두 번째 모델은 안철수 후보와 비교했을 때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상대적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유의성과 크기를 측정한 것이다. 연령변수가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안 후보보다는 홍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은 두 후보사이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념은 예상한 바와 같이 보수적일수록 홍 후보를 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또한 앞의 모델과 달리 유권자의 성별도 후보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에 비해 여성이 홍후보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집회태도를 보면 기준이 되는 집회찬성집단에 비해 촛불찬성 입장을 유권자들은 홍 후보보다 안 후보를 택할 가능성이 5배가량 높았다. 한편, 집회찬성자들에 비해 맞불찬성집단에 속한 유권자들은 안 후보보다 홍 후보를 택할 확률이 2.4배 그리고 집회반대집단의 홍 후보 선택 확률은 2.5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촛불반대 집단이 두 집회 모두 찬성하는 집단에 비해 홍 후보에 대한 선호가 훨씬 강하며, 이 때 맞불 집회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의 문제는 홍 후보 선택확률에 별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촛불찬성과 촛불반대의 태도가 홍 후보 선택여부에 중요했지만, 맞불 집회에 대한 찬/반 태도는 홍 후보 선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국민의당 지지자들보다 홍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는데 그 확률은 13배에 달한다.

[표 8]에서 제시한 통계치는 독립변수 간의 영향력을 통제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앞의 이변량 분석에서 확인한 결과와 의미가 다르지 않다. 또한 유권자들은 안 후보와 문 후보 중 선택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변수와 안 후보와 홍 후보 사이의 선택에서 사용한 독립변수가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촛불집회를 찬성한다 해도 맞불집회에 대한 평가태도의 차이가 문 후보와 안 후보 사이

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안 후보와 홍 후보의 경쟁에서 보면 촛불찬성이 동일해도 맞불집회에 대한 태도에 따라 안 후보와 홍 후보를 택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맞불집회에 대한 찬성 여부와 관계없이 촛불찬성과 촛불반대라는 입장에 따라 홍 후보와 안 후보 선택 확률에서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V. 요약과 함의

이 글은 주요한 두 정당에 대한 태도가 일차원의 양극적인 행태로 나타나지 않고 다차원적으로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들의 성과에 착안해서(Maggiotto and Piereson 1977; Petrocik 1974; Shively 1980; Valentine and Van Wingen 1980; Weisberg 1980), 정치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태도 역시 한쪽을 찬성하면 다른 한쪽을 반대하는 양극단의 태도뿐만 아니라 동시에 긍정적이거나 동시에 부정적인 다른 태도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 글은 2016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벌어진 촛불집회와 맞불집회를 둘러싼 네 가지 태도에 주목하면서 이들의 성격과 19대 대선 당시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였다.

분석에서는 먼저, 촛불·맞불집회와 관련해서 촛불집회를 찬성하며 맞불집회를 반대하는 태도와 촛불집회를 반대하고 맞불집회를 찬성하는 양극단의 대립적 태도뿐만 아니라 맞불집회와 촛불집회를 모두 찬성하거나 모두 반대하는 태도 또한 전체 유권자들 사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두 집회를 모두 찬성하는 유권자가 20대와 중도층에서 가장 많았다는 분석 결과는 그러한 태도가 자유주의적 성향일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또한 민주화세대가 진입한 50대에서 두 집회를 모두 반대하는 태도가 맞불찬성 태도만큼 많았다는 것은 50대의 보수주의가 60대 이상과 비교해서 다를 수 있음을 말해준다. 두 집회를 모두 찬성하는 집회찬성집단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보수의 개혁을 내건 바른정당의 지지층 중 두 집회를 모두 반대하는 유권자가 촛불반대-맞불찬성의 유권자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난 결과는 두 집회태도가 기존의 정당균열 라인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다차원적으로 나타난 네 가지 집회태도가 19대 대선에서의 투표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두 집회를 모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유권자(상충적 유권자)는 두 집회 간에 찬성과 반대의 교차적 태도를 갖는 유권자(일관적 유권자)에 비해 투표결정 시기가 투표 당일까지 늦어졌고, 지지후보의 변경 비율도 높았다.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촛불찬성 태도의 유권자들은 후보 선택의 이유로 적폐청산을 가장 많이 지목했고, 반면에 맞불찬성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이 홍준표 후보를 선택한 이유로 보수의 상징이라는 점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를 선택한 집회찬성집단의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책과 국민통합이 가장 많이 거론되었고, 홍준표 후보를 선택한 집회반대집단의 유권자들 또한 정책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또한 집회찬성집단과 집회반대집단의 유권자의 이념 정체성은 두 집회 사이에 찬반의 교차적 태도를 갖는 유권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두 집회에 대해 같은 방향의 태도를 갖는 유권자들이 두 집회 사이에 찬반의 교차적 태도를 갖는 유권자들보다 선거운동에서 나타난 후보 태도나 정책 이슈를 놓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향이 국정농단 사태에 의존하는 후보 선택보다 더 강하는 것을 보여준다.

정당의 지지 변화와 관련해서 보면, 집회찬성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의 정의당 지지 증가와 집회반대집단에 속한 유권자들의 바른정당 지지의 증가가 눈에 띈다. 반면에, 촛불찬성집단에 속한 유권자들의 국민의당 지지 철회가 높고, 집회반대의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의 국민의당 지지 철회 또한 높았다. 이는 집회에 관한 상충적 태도를 지닌 유권자들이 두 집회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상반적 태도를 가진 유권자들에 비해 선거경쟁에서 덜 예민함을 보여준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집회찬성집단에 속한 유권자들의 정의당 지지가 증가한 것은 이 집단의 성향이 이념적으로 가장 진보적이어서가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정의당이 시민 참여나 동성애자 결혼 문제에 가장 자유주의적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두 집회를 모두 반대한 유권자들의 바른정당으로의 유입 또한, 이들이 갖는 보수주의 성향이 바른정당이 내건 개혁적 보수 성향과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집회태도가 후보선택에 미친 영향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에 의하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의 선택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변수와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의 선택에서 고려한 독립변수가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촛불집회를 찬성한다 해도 맞불집회에 대한 평가태도의 차이가 문 후보와 안 후보 사이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고, 안 후보와 홍 후보의 경쟁에서는 촛불집회에 대한 찬성여부가 후보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집회태도가 경쟁하는 후보들 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 결과는 집회태도의 성격 또한 다층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서로 대립하는 집단행동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가 일차원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투표선택에도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이 글의 분석 결과는 유권자 수준에서 이념적 분화를 보여주며, 유권자와 정치세력 사이의 지지연합이 다양화될 수 있음도 시사한다. 즉,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민주 대 반민주’ 성격의 정치균열이 전면화된 가운데, 이를 가로지르는 ‘자유주의 대 보수주의’의 정치균열이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잠복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유주의적 성향의 유권자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존재하고, 낡은 냉전적 사고에 비판적인 합리적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5-60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들은 국정농단사건에 의해 형성된 선거구도에서 벗어나 선거 운동에서 나타난 후보태도나 정책이슈 중심의 투표선택을 하는 경향이 높았고, 이들의 진심투표는 지난 19대 대선의 막바지에 정의당과 바른정당의 일시적인 지지 반동을 주도했을 것이다.

이 글은 지난 대선 직전 약 5개월 동안 뜨겁게 전개되었던 촛불집회와 맞불집회를 둘러싼 유권자 태도의 성격을 알아보았고 이들이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가치나 이념성향을 묻는 설문문항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집회태도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항들이 갖추어진 다른 자료를 활용해 연구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나가는 작업은 향후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 김연숙. 2014. “한국 유권자의 투표결정 시기에 관한 연구.” 『한국정당학회보』 13(1), 33-63.
- 김장수. 2005. “비대칭적 활성화와 정당에 대한 상충적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39(2), 145-169. 95-126.
- 이지호. 2008. “한국 정당경쟁의 이념적 차원: 권위주의시기와 민주주의시기의 비교.” 『한국과 국제정치』 24(4),
- 이지호 · 이현우 · 서복경. 2017. 『탄핵광장의 안과 밖: 촛불민심 경험분석』. 서울: 책담.
- 정한울. 2012. “민주화 이후 정당 태도갈등의 심화 요인 연구: 상충적 태도갈등이론으로 본 유권자의 정당태도 변화.” 『아세아연구』 55(4), 157-197.
- Cacioppo, John T. and Gary G. Berntson. 1994.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and Evaluative Space: A Critical Review, with Emphasis on the Separability of Positive and Negative Substrates.” *Psychological Bulletin*, 115(3), 401-423.
- Cacioppo, John T., Wendi L. Gardner, and Gary G. Berntson 1997. “Beyond Bipolar Conceptualizations and Measures: The Case of Attitudes and Evaluate Space.” *Personality and Psychology Review* 1(1): 3-25.
- Crag, C. Stephan, and Martinez D. Michael. 2005. *Ambivalence and the Structure of Political Opin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Maggiotto, Michael. A., and James E. Pierson. 1977. “Partisan Identification and Electoral Choice: The Hostility Hypothe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1(4), 745-767.
- Petrocik, John R. 1974. “An Analysis of Intransitivities in the Index of Party Identification.” *Political Methodology* 1(3), 31-47.
- Shivley, P. 1980. “The Nature of Party Identification: A Review of Recent Developments.” In John E. Pierce and John L. Sullivan, eds., *The Electorate Reconsidered*. Beverly Hills: Sage.
- Valentine, David C., and John R. Van Wingen. 1980. “Partisanship, Independence, and Partisan Identification.” *American Politics Quarterly*, 8(2), 165-186.

Weisberg, Herbert F. 1980. "A Multidimensional Conceptualization of Party Identification."
Political Behavior 2(1), 33-60.

투고일: 2017.07.07. 심사일: 2017.07.31. 게재확정일: 2017.07.31.
--

Effects of the attitudes toward the candlelight protest and the counter-protest on voting behaviour i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Hyeon-Woo Lee • Jiho Lee • Bokyeung Seo |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scrutinizes popular attitudes toward the candlelight protest and the counter-protest, occurred between October 2016 and March 2017 in South Korea. The paper focuses on the contradictory attitudes that agree or disagree with both of the confronting actions, comparing with the consistent attitudes that agree with one and disagree with the other. One of the main findings is that the voters having contradictory attitudes were more likely to defer voting decision and more likely to change supporting candidates than the voters having consistent attitudes. Another finding is that the voters who agree or disagree with both of the two protests are more centrists and more likely to support the third party or minor parties.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analyses that voters' attitudes toward the confronting actions do not appear on the one-dimension and have different effects on voting choice suggest that the supporting coalitions between voters and political parties might form diversely across the existing party cleavage line.

Key Words | Candlelight Protest, Counter-Protest, Consistent Attitude, Contradictory Attitude, Voting Behavior